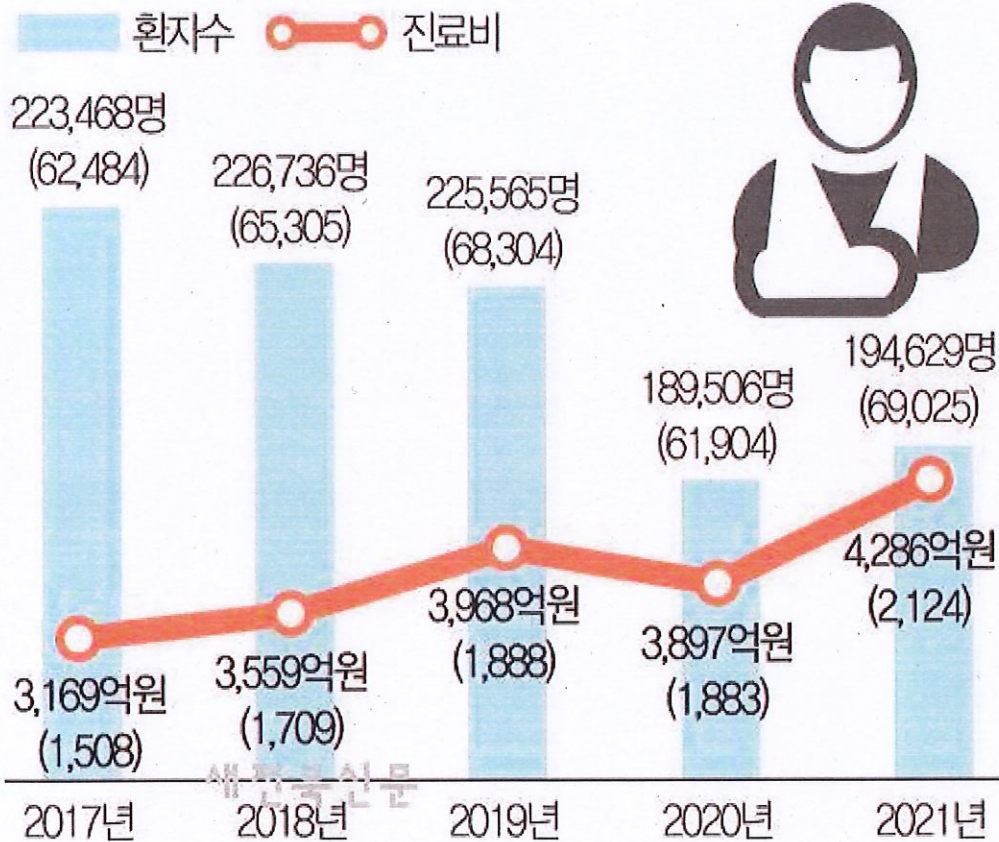


"소아과도 없는데 어떻게 애 낳고 키우나"

-지방 소멸위기에 의료붕괴도 가속화
-산부인과 줄폐업에 공공병원 체불도

■ 전북도민, 수도권 원정진료 현황

// 는 3차 상급종합병원



■ 전북도의회 10월 임시회

-수도권 원정진료 일상화에 특단 필요

"한때 지역사회 소멸현상이 뭔지 잘 몰랐다. 아이가 아프면 데려갈 병원조차 없다는 사실을...둘째를 갖다는 것은 말도 안되고 여기서 계속 살아가야 하는지마저 심각히 고민하고 있다."

지난해 이맘때 군산에서 고향인 김제로 이사한 삼십대 중반 정모씨 부부의 한숨 섞인 푸념이다. 세 살배기 하나를 둔 부부는 노부모 부양 겸 아이를 맡기고 맞벌이 할 요량으로 귀향했다고 한다.

하지만 최근 한바탕 큰 소동을 겪은 부부는 군산으로 되돌아가야 하는 것 아니는지 깊은 고민에

빠졌다. 어느 휴일 급작스레 고열에 구토까지 하는 아이를 안고 김제 일대 병원을 헤매다 전문의를 못찾아 전주까지 내달릴 수밖에 없었던 이른바 '응급실 뽕뽕이'를 경험한 뒤 생긴 문제다. 당시 아찔했던 순간만 떠올리면 한숨이 절로 나온다고 한다.

지방 소멸위기 속에 이 같은 의료붕괴 현상마저 가속화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진형석(전주2), 염영선(정읍2), 임승식(정읍1) 전북도의회원은 11일 개최한 10월 임시회 자유발언대에 차례로 올라 필수 의료체계 공백사태 방지대책, 특히 줄줄이 폐업중인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확보 대책을 비롯해 임금체불 위기까지 직면한 공공병원 정상화 방안 등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현재 도내 산부인과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통틀어 139개, 즉 도내 시·군이 14곳인 점을 고려하면 1곳당 10개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이 가운데 무주는 전무하고 순창은 단 1개만 명맥을 유지할 지경이다.

산후조리원은 한층 더 심각해 고작 9개만 남겨진 실정이다. 이마저도 전주, 군산, 익산을 제외하면 단 1개도 없다.

소아청소년과 또한 마찬가지로 그 진료가 가능한 도내 의료기관은 총 96개, 이중 무주, 장수, 임실은 전무했다. 이 가운데 소아청소년 응급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응급의료기관은 단 10개, 지역별론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진안, 고창 등 모두 7곳에 불과했다.

이는 저출산 출향행렬로 인한 인구절벽 현상과 중소도시 의료기관 수익 악화, 전문의 수도권 취업 집중화와 비인기 진료과목 전공 기피현상 등 악순환이 반복된 결과로 풀이된다.

진형석 의원은 이 같은 실정을 놓고 "올들어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 등 도내 모든 수련병원에서 소아청소년과는 전공의 모집조차 미달된데다 그 전문의를 구하지 못해 국가가 지원하는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 공모사업에 응모조차 못할 지경까지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전북도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아청소년과에 한해 의료기관 설립 규제 완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염영선 의원은 "범정부 차원에서 공공아동전문병원 설립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지만,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려면 비영리 민간단체의 의료기관 설립 규제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의원급조차 병원급 수준으로 제한하고 있는 전라북도의 까다로운 규제는 풀어줄 필요가 있다"며 전향적인 검토를 촉구했다.

현행법상 입원환자 없이 외래진료만 하는 의원급은 지자체 신고만으로 의료기관 설립이 가능하지만 전북도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 난립을 막겠다며 자체적인 행정규칙을 만들어 병원급(100병상 이상) 수준으로 그 진입 장벽을 높여놓은 상황이다. 덩달아 민원도 적지않은 실정이다.

이른바 '코로나19 영웅(전담병원)'으로 불려온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 등 공공병원 경영난 해소책도 시급하다고 지적됐다.

군산의료원의 경우 코로나19 파동 직전인 2019년 총 61억 원대에 달하는 흑자를 기록했지만 올들어선 7월말 기준 약 47억 원의 적자를 봤다. 남원의료원은 동기간 15억 원대였던 적자액이 89억 원대로 6배 가까이 늘어나면서 또다시 임금체불 위기에 몰렸다.

코로나19 파동기 때 외래진료 중단으로 인한 막대한 손실을 입은데다 정부마저 올 4월 그 손실보상금 지원을 중단한 여파 등으로 알려졌다.

임승식 의원은 "지방의료원이 도산위기에 처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내 취약계층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전북도는 즉각 그 정상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방 의료붕괴 현상에 수도권행 원정진료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최근 5년간(2017~21년)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전북도민은 약 106만명, 즉 한 해 평균 22만 명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 진료비 또한 재작년 총 4,286억 원대에 달해 5년만에 무려 1,000억원 가까이 늘었다.

더욱이 전체 원정진료자 70% 가량이 3차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이른바 '동네병원'으로 불리는 1차, 또는 2차 병원을 찾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큰병뿐만 아니라 작은병조차 수도권으로 달려가는 사례가 많다는 의미다.

/정성학 기자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지면 : 2023-10-12 1면

<http://sjbnews.com/794789>

전북지역 소아청소년과 등 의료인력 부족 '심각'...도민 5만여명 수도권 '빅5 병원' 진료, 갈수록 커지는 '의료 격차'

박경민 기자 | 승인 2023.10.12 05:12

2023 국정감사 이슈

소멸 위기에 놓인 전북 농어촌지역에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부재 등 의료사각 지대와 의료인력 부족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어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한층 요구된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11일 열린 전북도의회 제404회 임시회에서 진형석(전주2)·염영선(정읍2)·임승식(정읍1) 도의원은 자유발언에 차례로 나서 필수 의료체계 공백사태 방지대책과 줄줄이 폐업 중인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확보 대책, 임금체불 위기에 직면한 공공병원 정상화 방안 등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전북대·원광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모집 비상...의료인력 부족 사태 심각”



전북도의회 전경

먼저 진형석 도의원은 이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은 지난 2018년 101%에 달했으나 지난 2021년 38.2%, 2023년 25%까지 매년 급감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올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를 모집한 전국 수련병원 66곳 중 55곳은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는 실정인 가운데 전북지역 상황은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올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모집에서 전북대병원이 4명을 모집할 계획이었으나 단 1명만 지원했다"고 밝혔다.

또한 "원광대병원과 예수병원은 아예 전공의를 모집하지 못했다"는 진 의원은 "현 추세가 지속되면 오는 2025년 전국적으로 정원대비 500명의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부족사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도내 20개 응급의료기관 중 10개 기관만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배치된 상황이다. 김제와 무주, 장수, 임실, 순창, 부안 등의 응급의료기관은 아예 전공의가 없다. 결국 이들 지역 주민들은 소아 응급환자 발생시 전주 등 도시권으로 이동해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진 의원은 "도내 의료자원 역량을 전반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재정효율성 측면에서 선택과 집중을 요하기 보다는 분배와 균형을 통해 의료체계의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유발언에 나선 염영선 도의원은 "범정부 차원에서 공공아동전문병원 설립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지만,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려면 비영리 민간단체의 의료기관 설립 규제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의원급조차 병원급 수준으로 제한하고 있는 전북도의 까다로운 규제는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공의료원 경영난 해소책 시급...남원의료원 임금체불 위기 몰려"

염 의원은 또 "현행법상 입원환자 없이 외래진료만 하는 의원급은 지자체 신고만으로 의료기관 설립이 가능하지만 전북도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 난립을 막겠다며 자체적인 행정규칙을 만들어 병원급(100병상 이상) 수준으로 그 진입 장벽을 높여 놓은 상황"이라며 "'코로나19 영웅(전담병원)'으로 불려온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 등 공공병원 경영난 해소책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군산의료원의 경우 코로나19 파동 직전인 2019년 총 61억원대에 달하는 흑자를 기록했지만 올들어 7월말 기준 약 47억원의 적자를 봤다"며 "남원의료원은 동기간 15억원대였던 적자액이 89억원대로 6배 가까이 늘어나면서 임금체불 위기에 몰렸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이날 임승식 도의원도 "지방의료원이 도산 위기에 처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내 취약계층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전북도는 즉각 그 정상화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수도권 원정 진료' 심각...전북 '빅5 병원' 환자 지난해 5만여명



전북대학교병원 전경(사진=전북대 제공)

한편 지역 의료 붕괴 현상에 수도권행 원정 진료가 급증세를 보이면서 지역 의료계에 대한 신뢰도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음을 반증해 주고 있다. 지난해 전북도민 5만여명이 이른바 수도권의 '빅5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빅5 병원은 대형 상급종합병원으로 수도권에 소재한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을 지칭한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인 김원이(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8~2022년)간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103만4,000여 명의 환자가 빅5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전북지역에서는 5만 2,429명의 환자가 빅5 병원으로 원정 진료를 받았으며, 지난 2013년(3만 5,154명) 보다 49.1%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북은 비수도권 중 증감률이 5번째로 높았으며 이는 전국 평균 증감률(42.5%) 보다 6.6%가 높은 수치로 밝혀졌다.

“중증질환 치료하는 거점 대학병원, 수도권과 의료 격차 심화...적극 지원·육성해야”



원광대학교병원 전경(사진=원광대병원 제공)

이 외에도 비수도권 환자들이 빅5 병원에서 지출한 원정 진료비가 크게 늘었다. 빅 5병원 의료비 총액(의료공단 청구금액과 본인 부담금 합산)은 지난 2013년 9,103억여원에서 2022년 2조 1,822억여원으로 약 140%나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구나 고가의 항암제 등 비급여 진료비까지 합하면 지방환자들이 빅5 병원에 지불하는 의료비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됐다.

이 같은 환자 쏠림은 교통망 확충으로 인한 접근성 강화와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으려는 수요자들의 증가와 더불어 비수도권 환자가 느끼는 지역 간 의료 격차가 크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역거점 국립대병원이 소재한 광역시보다는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 환자들이 빅5 병원을 더 많이 찾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김원이 국회의원은 "의료 격차가 심해질수록 지방 소멸은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며 "광역시가 아닌 지방 중소도시에도 중증질환을 치료하는 거점 대학병원을 지원·육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경민 기자



